

VI. 北韓 動靜

1. 對北韓 食糧 支援 政策의 變化

- (북한의 식량난)
 - 올해 곡물 부족량은 약 300만 톤으로 예상됨
- (남한의 대북 지원 정책 변화)
 - 기본 입장은 식량 지원을 전제한 4자회담 개최는 불가하다는 것임
 - 최근 민간 차원의 식량 지원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북 지원을 어느 정도 허용함
 - 북한이 4자회담을 수락하는 경우 정부는 대규모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임
- (국제적 지원의 진전 상황)
 - 국제 지원의 핵심은 유엔이며, 적십자사의 노력도 돋보임
 - 국가별로는 한·미가 지원의 주축이며, 중국이 지원에 가세하고 있음
- (추진방향)
 - 단기적으로 대북 지원은 식량 지원이 문제이나,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 및 기술의 제공이 문제임
- (의의)
 - 기업의 대북 지원은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남한 기업 인식 제고를 통해 경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

올해 곡물 부족량은 약 300만 톤으로 추정됨

- (북한의 식량난 현황과 원인) 올해 곡물 부족량은 약 300만 톤으로 추정됨
 - 생산 부진 이유로는 수해로 인한 작물 피해, 가뭄 및 이상 저온, 농업 기자재 부족과 개혁의 미비로 인한 영농의욕의 감퇴 등을 들 수 있음
 -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식량 문제 해결을 최대 과제로 선정하고 있음
 - 최근 WFP(세계식량계획) 사무국장 C. Bertini는 북한 어린이의 대부분이 영양실조 상태임을 밝히고 있음

< 주요기관의 북한 곡물 생산 및 수요 추정치 >

(단위: 만 톤)

	농촌 진흥청	FAO·WFP 공동조사	북한 큰물피해대책위
곡물 총생산량	369	299.5	250.2
곡물 수요량	677	535.9	784.0
곡물 부족량	308	236.4	533.8

주: FAO(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): 국제식량농업기구

WFP(World Food Program): 세계식량계획

남한의 기본 입장은 식량지원을 전제한 4자회담 개최는 불가하다는 것임

3월 31일 정부는 민간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허용하였으며, 북한이 4자회담을 수락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것임

유엔 산하 기구의 북한 지원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, 적십자사를 비롯한 민간 기구의 참여도 돋보임

○ (남한의 대북 지원 정책 변화) 기본 입장은 식량 지원을 전제한 4자회담 개최는 불가하다는 것이나, 최근 민간의 쌀지원을 인정하였고, 북한이 4자회담을 수락하는 경우 대규모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임

- 97년 1월 ~ 2월: 대북 지원 불허용
 - 97년 1월 7일 대통령 연두회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4자회담 성사 후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힘
 - 97년 2월 17일 황장엽 망명과 이한영 피습사건 직후 식량 지원 및 경수로 인력 파견, 적십자사를 통한 소규모 지원까지 재고하기로 함
- 97년 3월 중: 민간 대북 지원의 제한적 허용
 - 97년 3월 4일 대한적십자사를 창구로 한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품목 범위를 확대함
 - 벼씨와 보리 종자를 포함한 곡물 종자와 씨감자 등의 지원은 허용하는 반면, 쌀지원은 허용 않음
- 97년 3월 말 이후: 민간 대북 지원의 사실상 허용
 - 97년 3월 31일 민간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허용하고 기업체의 대북 지원 참여도 경제 단체를 통해 가능하도록 함
 - 정부는 4자회담과 연계한 식량 지원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북한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것으로 보임
- 북한이 4자회담을 수락한다면, 정부는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임

○ (국제적 지원의 진전 상황) 대북 지원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, 적십자사를 비롯한 민간기구의 참여가 두드러짐

- 중국은 작년 북한에 식량 54만 톤을 지원함
 - 이 중 14만 톤 정도가 무상지원인 것으로 알려짐
 - 향후 5년간 매년 50만 톤 식량 지원을 약속함
- 일본은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식량 지원을 결정하였으나, 소녀 납치 사건 등으로 실제 지원에 미온적임
- 미국은 WFP 대북 식량 지원에 동참하여 1,500만

달러를 원조하기로 발표함

- 이는 지난 2월 19일 1,000만 달러 원조 발표보다 진전된 것임
- 한국은 유엔 인도지원국(DHA: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)의 제3차 대북 식량 지원분인 1억 2,600만 달러 규모 가운데 10~15%인 1,300~1,900만 달러를 부담할 것으로 보임

북한의 장기적인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식량 지원이 아니라 기술의 제공이 필요함

- (추진 방향) 앞으로의 대북 지원은 단기적인 식량 지원 뿐만 아니라, 북한 지역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 프로그램 하에서 이루어져야 함
 -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통일 후 남북한 곡물 부족량은 2,000만 톤으로 예상됨
 - 북한의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토양 개량 및 토지 개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함
 - 이를 위해 비료·농기구의 반출, 농업 기술 및 자금의 유무상 제공을 고려할 수 있음
 - 북한 농업 생산력을 단기에 향상시키기 힘들다면, 연해주 등 러시아, 중국 지역에서 남북한 합작으로 공동 경작을 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

대북 지원은 통일비용의 절감과 북한의 對남한 적대행위 포기와의 조화 필요

- (평가) 대북 지원은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, 한편으로는 북한의 對남한 적대행위 정책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일조하는 실리가 있어야 함
 - 대북 식량 지원은 인도적 차원 뿐 아니라 통일 대비 차원으로 그 의의를 확대할 수 있음
 - 민족 의식 동질화라는 궁극적인 통일 목표를 위해서는 대북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대남 의식 개선 역시 중요한 의의를 지님
 - 하지만, 아직도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지 않고 있는 북한 당국이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(황 동 언)